

‘핵무장’ 자기방어로 인식하는 북한 북·미수교 이끌어야 한반도 비핵화

전문가 칼럼

김민웅
교육대학원 교수

북한의 핵 무장체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실은 강력한 대응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 만일 남과 북이 군사적 대결로 가는 과정에서 북의 핵무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매우 비상한 조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런 맥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5일 말했듯이 “북을 재기불능상태로 만들 힘” 있다고 대응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북의 핵 무장 체제 강화의 1차적 본질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사태라는 점을 알면 해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통하지 않은지 이미 오래다. 그러한 방식은 도리어 북의 핵무장의 정당방위적 절실성을 확신하는 쪽으로 몰아갔다. 비핵화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핵무장의 문이 열린 것은 그 사이에 평화적 해법에 기대를 걸어도 통하지 않았던 상황이 존재한 결과다. 미국에게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요구했던 것은 북이었고, 이를 거부하고 군사적 소멸 대상으로 북을 대했던 것은 미국이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 입증 가능한 ‘사실’이다.

해법은 북한과 미국의 수교

가령 2000년 클린턴 정부 당시 북의 2인자 조명록 차수의 방미와 잇따른 올브라이트의 방북, 그리고 북미 공동선언은 그간의 꾸준한 대화노력을 통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수교 직전의 상황을 뜻했다. 하지만 이후 들어선 부시정부에 의해 좌절된다. 수교논의의 대상이었던 북은 그간 미국과 진지하게 서로 오갔던 이야기



북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와 수교를 위한 대화를 하는 과정은 매우 길 것이다.

(사진=중앙일보DB)

와는 달리, 좀지에 미국에 의해 박멸되어야 할 악의 죽이 되고 만다. 북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

세계 최강국의 적대적 군사정책 앞에 놓인 국가가 평화적 대화의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다고 여긴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는 분명하다. 압박에 굴복을 하거나, 이에 끝까지 저항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생존의 길을 확보하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전자를 원했고, 북은 후자를 택했다. 북한의 핵무장이 가진 본질은 여기에 있다. 당연히 이는 핵무장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것과는 별도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작전(Operation Plan)”라는 이름의 점령정책과 함께 정권교체와 참수작전(decapitation operation)까지 준비되어 있는 미국의 전략지침이 수시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 비중을 가진 자기방어체제로 인식하고 있는 핵무장 자체를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상대가 이를 받아들일까? 더군다나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좌절시킨 아들 부시 이후 미국의 핵 태세의 기본 전략은 “핵 선제공격(nuclear pre-emptive strategy)”이며 참수작전은 상대방 지휘부에 대한 핵공격과 지도부 제거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해법의

출발점은 이와 같은 북의 인식과 관점, 태세를 이해하는 작업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제 아무리 강력한 압박과 제재라고 할지라도 체제의 생존을 내어주는 방식은 항복하기 이전에는 결코 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질문은 북이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끝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교를 통한 관계 정상화가 최종 목적인가 하는 것이다.

전쟁보다 나은 평화정책

해법은 확실하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쪽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직접 대응이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응이다. 핵과 미사일 실험의 실제적 방향이 미국을 향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당연히 핵무장과 이에 기초한 전략은 해체되어야 한다. 결국 상호 위협이 될 조건을 함께 소멸시키면서 평화와 수교를 위한 대화로 가는 길을 여는 것 외에는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는 남과 북 우리 민족 전체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雙中斷)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뜻하는 쌍궤병행(雙軌並行)은 중국의 시진핑만의 제안이 아니다. 최종 목적지는 북한과 미국의 수교다. 동북아시아의 적대구조는 이로써 사라진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대안이다. 상대에게만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다. 대화는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을 만들기 위한 돌파형 대화도 있다.

평화협정과 북한-미국 수교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은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평화정책이다. 북한과 미국, 일본의 수교는 한반도 교차외교의 균형을 위해서도 이는 필요하다. 이런 목표와 의지가 분명할 때 남북대화도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평화협정 논의의 시 북이 제기할 미군철수 문제는 과거에도 이미 남북이 나눈 구상대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변경을 통해 풀어갈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다. 핵무장 해체는 이 과정에서 풀어야 한다.

매우 긴 여정이다. 그러나 전쟁보다 절대적으로 낫다. 더군다나,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 우리 학교의 평화정신 아닌가?

※외부 필자의 원고는 대학주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여마당

김리나
(언론정보학 2016)



20대는 어디에 누워야 하는가

작년 가을 자취를 결심했다. 통학길 숨 쉴 틈조차 없이 어떻게 든 몸을 우겨 넣는 ‘지옥철’을 하루에 2시간씩 타는데 지쳐버렸기 때문이다. 집에서 늦게라도 출발하는 날에는 종일이 불안감으로 범벅되는 경험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늘 그랬듯 냉혹했다. 갓 대학에 입학한 20대가 부동산 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리 만무했다. 잠깐 인터넷 검색만 했을 뿐인데 등기부등본이나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같이 보기만 해도 어려운 용어들이 한 가득 등장했다. 중고등학교 때 ‘볶음밥 당근을 몇 센티미터로 썰어야 하는지’ 배웠던 기억은 있는데,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항목인데 대체 누가 알려주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어려운 용어들을 어찌 넘어오니 더 큰 진입장벽이 있었다. 한 달 생활비가 최소 100만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교통비는 줄지만 비싼 월세 때문에 티도 나지 않았다. 여기에 통신비 내고 생필품 구입하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다. 전공서적들을 구입하는 학기 초나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야 하는 시기는 말할 것도 없었다. 문화생활 같은 건 고려할 여력도 없었다. 보증금으로 맡겨둬야 하는 목돈까지 헤아리니, 자취비용 전반을 내 알바비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임이 명확해졌다.

개다가 자취를 알아보며 주변의 자취생들과 대화하다 보니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많았다. 굽이굽이 골목진 자취방 주변의 환경 때문에 동아리나 학과 모임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할 때에는 간담이 서늘하다고 했다. 찬물밖에 나오지 않아 집 주인에게 알렸는데, 몇 번을 말한 뒤에야 해결된 적도 있었다고 한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자취생을 반겨주는 건 냉기나 감도는 작은 방과 쌓인 빨랫감, 유통기한이 지난 채소 같은 것들뿐이었다. 와중에도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에는 걱정하실까 하는 염려에, 잘 지내는 척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복잡한 계약 절차들, 그 너머의 경제적 부담들, 그리고 그 너머 혼자 살며 겪는 어려움들을 모두 이겨낼 자신이 없었다. 말로만 듣던 세상물정, 정말 이렇게 배우는 건가 싶었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지만 지평선 하나에 대한的好奇心가 사무친다. 이 땅에 살아가는 청춘들의 현실이 이렇게 고민고민한데, 열심히 살면 미래에는 좀 더 나아질까? 그런 생각을 하며 펜을 내린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J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